



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

-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□ 한국일보는 8.21일 「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‘규제개선’ 성공은 24% 뿐」
제하의 기획기사*에서,

○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,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, 저조한
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.

* (사례)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, 약국 앞 화상투약기,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

2. 설명내용

□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
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*들에
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,

*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,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, 법령정비 지연 등

○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「규제샌드박스
운영 개선방안」을 마련·발표한 바 있습니다.(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, 8.1)

□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
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,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
튼튼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고지숙 (044-200-2435)
	규제혁신기획관실	담당자	사무관	곽재완 (044-200-241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